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신규업무전담인력 보강 및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기계6급 1명, 전기7급 1명)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 및 일부조정하기 위한.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965명 → 977명 (증 1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948명 → 960명 (증 1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증원 및 조정내역

〈일반직〉 735명 → 747명 (+ 12명)

○ 6 급 : 186명 → 188명 (본청 +2)

○ 7 급 : 218명 → 224명 (본청 +6)

○ 8 급 : 175명 → 179명 (본청 +4)

〈기능직〉 167명 (변동없음)

○ 7 급 : 15명 (본청 +2, 사업소 △2)

○ 9 급 : 51명 (본청 △2, 사업소 +2)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1과 같이 함(안 별표1)

라. 한시 정원표를 별표2와 같이함(안 별표2)

3. 자치법규안 : 불입

4. 신규 대비표 : 불입

5. 소요예산 : 335,496천원

6. 참고자료 : 불임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 통보
- 경북도 자치행정과-8856(2004. 11. 5)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 경북도 자치행정과-8398(2005. 10. 4)
-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지침
- 경북도 자치행정과-9209(2005. 10. 21)
-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 지침 통보
- 경북도 자치행정과-8036(2005. 9. 21)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한시인력 보강지침 통보
- 경북도 자치행정과-10185(2005. 11. 16)
-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통보
- 경북도 자치행정과-10533(2005. 11. 23)
- 2005. 12월말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직급직렬 정원책정 조정(안)
- 총무과-8385('05. 11. 23)

7. 관련법령 : 불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65”를 “977”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48”을 “960”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신 · 구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965</u> 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48</u>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u>977</u> 1. 집행기관의 정원 : <u>960</u> 2. (현행과 같음)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별표</u> 와 같다. <div style="text-align: right;"><신 설></div>	제3조(직급별 정원) <u>별표1</u> 과..... 제5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점수 및 직급별 정원은 <u>별표2</u> 와 같다.

<별지>

[별표1]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합 계			977	441	17	163	104	25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747	360	11	97	45	234
	4 급		5	3	1	1		
	5 급		47	17	2	5	4	19
	6 급		188	101	4	20	13	50
	7 급		224	112	3	17	14	78
	8 급		179	100	1	36	8	34
	9 급		104	27		18	6	53
별 정 직	소 계		19	3		14	2	
	6급상당		13			13		
	7급상당		6	3		1	2	
연 구 직	소 계		5	1		2	2	
	연구관							
	연구사		5	1		2	2	
지 도 직	소 계		38			38		
	지도관		3			3		
	지도사		35			35		
기 능 직	소 계		167	76	6	12	55	18
	6 급		5	2			3	
	7 급		15	9			6	
	8 급		24	10			14	
	9 급		51	31	5	3	10	2
	10 급		72	24	1	9	22	16

- 6 -

[별표2]

한시 정원표 (제5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7	일반직 : 6급1, 7급4, 8급2		
기획감사담당관실	4	일반직 : 6급1, 7급1	2007. 6.30	행정혁신업무
		일반직 : 7급1, 8급1	2007.12.31	사업별예산업무
총 무 과	1	일반직 : 7급1	2006.12.31	과거사정리업무
회 계 과	2	일반직 : 7급1, 8급1	2006.12.31	복식부기업무

관련법령 ·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

2. 참고자료

-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내용 요약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내역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통보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지침
-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 통보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한시인력 보강지침 통보
-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통보
- 2005. 12월말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직급직렬 정원책정 조정(안)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 (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④ 삭제

⑤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⑥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10.20>

⑦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담당신설 및 인력보강에 따른 -

公務員 定員條例 改正內容 要約

行 政 支 援 局
總 務 課

公務員 定員條例 改正內容 要約

□ 推進背景

-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지침 시달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2004.11. 5)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2005.10. 4)
 -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지침(2005.10.21)
 -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2005.11.23)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2005. 9.21)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한시인력 보강지침(2005.11.16)
- 기능직 공무원 직급직렬 정원책정 조정계획(2005.11.23)

□ 推進經過

- 조례개정 입법예고 : 2006. 1. 4~1.24 (20일간). 의견없음
- 개정조례(안) 확정 : 2006. 1. 25

□ 主要內容

- 담당신설 : 4개 담당
 - 공무원단체담당 : 총무과
 - 행정혁신담당(한시) : 기획담당관실 혁신분과담당 ⇒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분리
 - 복식부기담당(한시) : 회계과
 - 보육담당 : 사회복지과
- ※ 존속기한 : 복식부기담당(06.12.31), 행정혁신담당(07. 6.30)
- 정원증원 : 12명(한시정원 +7, 일반정원 +5)
 - 직급별 증원내역 : 6급 2명, 7급 6명, 8급 4명
 - 인력보강 내역 : 공무원 단체담당 3명(7급2, 8급1), 행정혁신담당 2명(한시. 6급1, 7급1), 복식부기담당 2명(한시. 7급1, 8급1), 보육담당 2명(6급1, 8급1), 사업별예산업무 2명(한시. 7급1, 8급1), 과거사정리 업무 1명(한시. 7급)
- ※ 무보직 6급 활용 : 공무원단체담당,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내역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정원 증원 : 12명 (일반직 12)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인 원	1인당 연간 총액인건비	산 출 내 역 (월 소요액×12월×인원)	비고
계	335,496	12			
6 급	62,592	2	31,476	$2,623 \times 12\text{월} \times 2\text{인} = 62,952$	
7 급	170,856	6	28,476	$2,373 \times 12\text{월} \times 6\text{인} = 170,856$	
8 급	102,048	4	25,512	$2,126 \times 12\text{월} \times 4\text{인} = 102,048$	

※ 인건비 판단 기준

- 기본급, 수당(기말, 정근, 가족, 초과근무)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 이 전 경 비(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12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보강 지침 홍보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509(2004.1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을 불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자체실정에 맞는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3. 또한, 보정정원을 초과한 시군에서는 공무원단체담당 정원을 불임서식에 의거 2004.11.6(토)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 1부

2. 보정정원초과 시군 정원신청서식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주시 이세우 지방행정사무관 이민남 자치행정과장 11/05
문정음

협조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종국 지방전산주사보 함진대 지방행정주시 차윤호

시행 자치행정과-8856 (2004. 11. 05.) 접수 총무과-7780 (2004. 11. 05.)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 seawoo@gb.go.kr / 공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

2004. 11월

행 정 자 치 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

1. 보강배경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단체인 사실상의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중이며
-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흡
- ⇒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 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2. 기구·정원 보강방침

☐ 소관부서

- 전담기구의 소속은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총무과(자치행정과 등)에 설치

☐ 기구·정원

< 기구·정원규모 >

- 시·도 : 1담당(공무원단체담당) 설치, 3명 보강원칙
- 5급 1, 6급 1, 7급 1
- 시·군·구 : 1담당(공무원단체담당) 설치, 3명 보강원칙
- 6급 1, 7급 1, 8급 1

< 정원책정원칙 >

- 6급 이하 인력은 자체적으로 보강하되, 보정정원의 초과로 인력보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정원승인 계획

- 시군구의 담당(6급)은 기구정원시행규칙 개정('04.9.24)에 따른 6급비율조정 또는 기존 무보직 정원을 활용하여 설치하되,
- 다만, 6급정원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6급정원의 증가가 1명도 없거나, 기존 행정직렬 무보직 6급정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6급정원 신청

※ 시군구 6급정원은 해당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신청

▶ 전담기구의 기능

□ 현기능

-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 추가될 기능

-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
 -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 공무원 연수·교육·홍보계획 수립 등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단체교섭·협약 매뉴얼 작성, 자료준비 등

3. 행정사항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계획 수립시행 및 자치법규 개정

- 보정정원초과로 자체적으로 인력보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2004.11.6(토)까지 정원승인 신청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의 소요인력 파악하여 일괄 신청

※ 보정정원초과 자치단체 정원승인 신청서식 : 별첨

- 16 -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탐-2625(2005.9.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보정정원을 초과한 시군에서는 오는 10.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인력보강지침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주사 이세우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곤 자치행정과장 10/04
반발목

협조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장춘 지방행정주사 자문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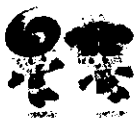
시행 자치행정과-8398 (2005.10.04.) 접수 총무과-7031 (2005.10.04.)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 seawoo@gb.go.kr / 공계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2005. 9월



지 방 행 정 본 부
(지방공무원제도팀)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I. 보강배경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06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 지자체 전면 확대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본격적 시행('07. 1. 1)에 앞서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시범운영기관 확대
- 제도의 공감대·실용성 확보를 위한 실무공무원의 검증결과 환류 등을 위한 시범자치단체의 전담기구·인력 보강 필요

그간의 추진경위

- '99. 2 복식부기 도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99.12~'03. 9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시범운영
- '03.10 2차 확대시범운영 및 표준화용역
- '04. 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 공포
- '04. 7 '04년 확대시범운영기관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54개 지자체)
- '05. 8 250개 전 지자체에 제도를 확산 보급키로 결정

Ⅱ. 수행기능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 설치운영

- 향후 개발될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 설치운영

□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징수, 과오납 환부 및 수납등 징수자료
 - 세출예산에 의한 원인행위 및 검수/검사, 지급명령자료 입력
-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과 시산표의 작성 및 대사
 -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등 결산보정거래의 적용
 -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산출

□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

-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재시 가액 결정
- 지방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 조사

Ⅲ. 정원보강 방침

1. 소관부서

- 회계·경리기능을 수행하는 회계과(재무회계과, 재무과, 총무과 등)에서 동 업무 전담

- 20 -

2. 정원 : 187개 자치단체, 580명

정원 규모

- 서울특별시 : 1담당(복식부기담당) 8명 보강
 - 행정5급 1, 행정6급 2, 7급 3, 기능9급(사무보조) 2
- 시·군·구 : 1담당(복식부기담당) 설치, 3명보강 원칙
 - 행정6급1, 행정7급1, 전산8급1
 - 다만, 수원시(7명), 성남·고양시(6명), 안양·청주시(5명)
 - ※ 일반구별 행정8급 1명 추가한 것임
- 존속기한 : 2006. 12. 31까지

정원채정 방향

- 정원은 자체적으로 보강하되,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인력 보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원승인
- 다만, 시군구의 담당(6급)은 무보직 정원을 활용하고, 기존 행정직렬 무보직 6급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6급정원 신청
 - ※ 무보직 정원을 활용하여 담당설치가 가능시에는 7급이하 2명 정원에 대해서만 승인신청
 - 시도에서는 해당시군구의 정원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절차 이행

▶ 기존 실시 지자체 : 63개 지자체, 223명

- 실시 지자체 : 63개(시도 15, 시군구 48),
- 정 원 : 223명(시도 60명, 시군구 163명)

IV. 행정사항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계획 수립시행 및 자치
법규 개정
- 보정정원초과로 자체적인 인력보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2005. 10. 5(수)까지 정원승인 신청
 -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의 소요인력 파악하여 일괄 신청

※ 붙임 : 1. 복식부기 확산보급 대상 내역 1부
2. 보정정원초과 자치단체 정원승인 신청서식 1부. 끝.

<붙임 1> '05년 확산보급 대상기관

지 역	인	대 상 기 관
	187	
서울	21	본청,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3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7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7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용진군
광주	3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0	
울산	4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25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15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1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	13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대안군
전라북도	8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전라남도	19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21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18	창원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3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지침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887(2005.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행정 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해 불임과 같이 “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 지침 ”을 통보하니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철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지방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 지침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주시 이세무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근

지방행정과장

10/21
변명록

협조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장훈

지방전산주사보

황진대

지방행정주사

차원호

시행 자치행정과-9209 (2005.10.21.) 접수

총무과-7507

(2005.10.21.)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 seawoo@gb.go.kr

/ 공개

- 24 -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지침



행 정 자 치 부
(지방행정본부)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 지침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 조직보강 지침임.

I. 조직보강 배경

1. 배 경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지방혁신을 추진 중
 - 2005.8 지방혁신진단 결과 빠른 속도로 혁신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정부부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
-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21C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혁신 가속화 필요
 - 특히,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CS)행정 혁신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2. 그동안 추진경위

- 지방혁신·분권·균형발전 전담조직 설치('04.4.26) : 총 890명
 - 시·도 :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4급), 3팀(혁신기획, 분권이양, 균형발전), 11명 총 186명
 - 시·군·구 :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6급), 3명 총 704명
 - 효율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 기구개편지침 시달('04.12.24)
 - 시·도 분장업무 조정 : 균형발전업무 → 경제부서로 이관
 - 시·도 기구·정원 보강 : 혁신지원팀 신설, 3명 보강(5급 1, 6급 1, 7급 1)
 - 혁신전담부서 소속 변경(도 및 시군) : 기획관리실장(기획감사실장) → 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과, 총무과 등 행정부서)
- ※ 지방행정혁신 조직 존속기간 : '04.5~'07.6.30까지 한시

II. 조직보강 지침

□ 기본방향

-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고객만족(CS) 전담조직 설치
- 시·군·구는 기존 「혁신분권담당(팀)」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운영

□ 정원증원 내용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이하	7급이하	비고
지자체 총인원	2516명	16명	3명		
시·도별	3	1	2		
시·군·구별	2		1	1	

※ 직렬은 지방혁신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충원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

○ 시·도

- 고객만족관련 혁신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혁신분권과(담당관) 내에 「고객만족행정담당」 신설
- 시·도별 각 3명(5급 1, 6급이하 2)을 증원

○ 시·군·구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담당(팀)」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담당별 인원은 적의 조정 배치)
- 시·군·구별 2명(6급 1, 7급이하 1)을 증원하되, 정원 증원 외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자체충원
- 고객만족행정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관련인력 중심으로 「고객만족행정담당(6급 1, 7급이하 1 등)」을 자체 구성·운영(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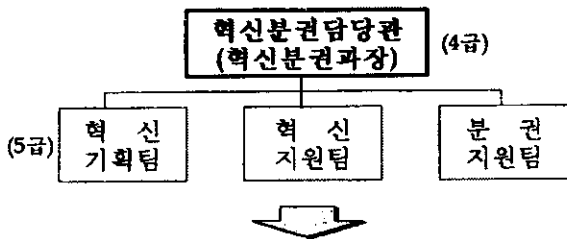
- 신설되는 3개 담당의 소관 부서는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되, 첨부된 업무분장(안)을 참고하여 업무를 분담

※ 현재, 지방혁신과 관련하여 과(담당관) 단위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동 지침상 기능보강 내용을 해당부서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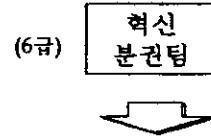
【 조직개편(안) 내용 】

《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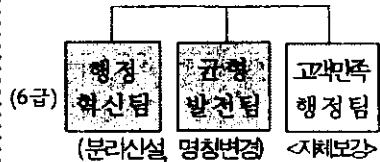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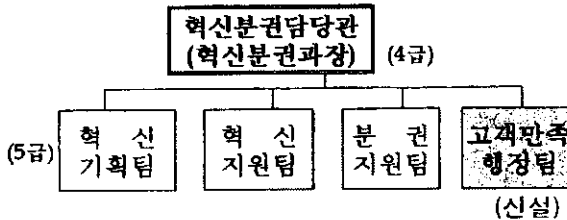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 변경 후 》



□ 인력보강 방법

- 각 자치단체는 본 지침을 근거로 지방혁신관련 부서에 인력 보강조치
 -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위해 별도 승인절차 생략(본 지침으로 승인 간주)
- 지방혁신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속히 보강·조치하되,
 - 시·도의 6급이하, 시·군·구의 7급이하는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별표5)상 직급별 비율을 지키어 충원

- 28 -

3. 존속기한 : 2007.6.30까지(한시)

※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04.4.26) 참조

IV. 행정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 지침을 근거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후 보강조치
- 기타 지방행정혁신 관련 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지방 혁신전략팀(☎ 02-2100-3725~3738)로 문의

※ 붙임 : 지방행정혁신관련 업무분장(안)



지방행정혁신관련 업무분장(안)

1. 시 · 도

① 혁신기획담당(팀)

- 자체 업무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 혁신 관련 자체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 혁신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 시·군·구 혁신 지원 및 분권·이양 업무 총괄·조정 등

② 혁신지원담당(팀)

- 시·군·구 혁신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 혁신 교육 및 학습 지원
- 시·군·구 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③ 분권지원담당(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과의 업무 협력
-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등

④ 고객만족행정담당(팀) - 신설

-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

2. 시 · 군 · 구

① 행정혁신담당(팀) - 분리신설, 명칭변경

-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등

② 균형발전담당(팀) - 분리신설, 명칭변경

-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 신활력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 총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

③ 고객만족행정담당(팀) - 자체보강

-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 주민친절도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 지침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509(2005.9.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의 2006년도 본격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자치 단체 별 한시정원보강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본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정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보정정원이 초과한 시군중 정원이 필요한 시군은 붙임 신청서식에 의거 2005.9.23(금) 까지 승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 1 부
 2. 정원승인신청서(엑셀서식)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경주사 이세우 자치행정과장 09/21 이언남

발조자 지방행정경주사보 조장준 지방행정경주사 자료호

시행 자치행정과-8036 (2005.09.21.) 접수 총무과-6803 (2005.09.22.)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seawood@gb.go.kr

/공계

- 32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

'05. 9.



행 정 자 치 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

2008년 본격 시행계획인 사업별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한시정원 보강 지침임.

I. 추진경과

- 정부혁신위 “전자정부로드맵 과제”로 선정('03.8)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시, 예산회계제도 전면개편 결정('04.3)
- 시범단체 '05~'06년 예산 사업별 시범 재편성('05.8)
 - ※ 추진계획 : 9('04.3) → 50('05.9) → 250개 지자체('05.11)
- 국가통합재정통계 기반 구축을 위한 기능분류 검토('05.8~)
- 사업별 예산제도 등 반영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05.6~)

II. 인력보강 배경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성과 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 '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실시
- 사업별 예산편성은 전혀 새로운 예산 체계로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범편성 실시
- 사업별 예산의 1차 시범편성(9개 지자체)에 이어, 2차 41개 지자체, 3차 200개 지자체의 시범편성에 따른 인력보강 필요

Ⅲ.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사업별예산제도 숙지 및 제도반영사항 발굴 건의
- 자치단체 내부공무원 교육
- 사업별예산 편성('05~'07, 평균 6회)
- 국가 - 자치단체 기능분류 연구 및 특성반영 검토
-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시험적용 등

Ⅳ. 운영인력 보강지침

□ 기본원칙

- 예산편성의 통합·연계성 등을 고려, 지자체별로 기존 예산 담당 부서에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을 보강
- 사업의 중요성, 업무량, 지자체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 기준만 설정, 인력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영

□ 시범사업 대상 단체

- 1차 시범단체 : '04.3.22~'05.12.31(한시), 9개 지자체
 - 시·도(4개) : 광주, 대전 / 경기, 강원
 - 시·군·구(5개) : 부천, 속초 / 평창 / 광주 동구, 대전 서구
- ⇒ 기간연장 : '06.1.1~'07.12.31(정원은 새롭게 조정)

○ 2차 시범단체 : '05.10.1~'07.12.31(한시), 41개 지자체

- 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충북·남, 전북·남, 경북·남, 제주
- 시·군·구(29개) : 수원, 고양, 원주, 강릉, 충주, 천안, 전주, 포항, 안동, 구미, 김해 / 강화, 여주, 음성, 단양, 금산, 진안, 담양, 곡성, 해남, 의성, 하동 / 영등포, 해운대, 금정, 대구 남, 대구 달서, 인천 연수, 울산 남

○ 3차 시범단체 : '05.11.1~'07.12.31(한시), 200개 지자체

- 시·군·구(200개) : 미 실시 기초 지자체 전부

□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책정 기준

○ 시·도 : 행정6급 1명, 전산7급 1명

○ 시·군·구 :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단 체	기 간	정원 기준					비 고
		계	광 역		기 초		
			행정6급	전산7급	행정7급	전산8급	
계		(500명) · 행정 250 · 전산 250	(16명)	(16명)	(234명)	(234명)	
1차(9개) 시범단체	'06. 1.1~ '07. 12.31	(18)	1 (4)	1 (4)	1 (5)	1 (5)	※ '06.12 종료에 따른 기간연장 및 정원조정
2차(41개) 시범단체	'05.10.1~ '07.12.31	(82)	1 (12)	1 (12)	1 (29)	1 (29)	
3차(200개) 시범단체	'05.11.1~ '07.12.31	(400)	-	-	1 (200)	1 (200)	

※ ()내서 : 총 인원수

□ 정원채정 방법

- 지자체별 정원채정 기준에 의거 자체 보강하고, 필요시 1~2명 정도 증원 조치(권고)
- 1차 9개 시범단체의 한시정원(광역 행정5급 1명, 기초 행정6급 1·기능10급 1명 등 총 12명)은 기한이 만료('05.12.31)되는 대로 정리하고, 본 지침 기준에 의거 새로이 채정
-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자체 보강이 어려운 자치단체 중 정원 증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기구정원규정 제14조규정 등에 의거 정원 승인을 득한 후 보강
 - 지자체별 인력수급계획, 예산부서 인력의 차이, 특성 등을 감안
 - ※ '05.6.30현재 보정정원 초과 : 총 161개 자치단체(광역 10, 기초 151)

V. 행정사항

- 사업별 예산제도 1~3차 시범운영 일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정원조정계획 수립·시행 및 자치법규 개정 등 조치
 - 필요시 시·도에서 정원채정 지침을 마련, 시·군·구에 통보
- 보정정원 초과 자치단체 중 정원증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05.9.26(월)까지 정원 승인신청(신청 서식 : 붙임)
 -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의 소요인력을 파악 일괄 신청
- 기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02-3703-4933)으로 문의

※ 붙임 : 보정정원 초과 자치단체 정원승인 신청서식 1부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한시인력 보강지침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72(2005.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2005.5.31 재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오는 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한시인력 보강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보정정원을 초과한 시군은 불임서식에 의거 2005.11.1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한시인력 보강지침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주시 이세우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근

자치행정과장

11/16
반영목

협조자 지방행정주시보

조장훈

지방행정주시

차윤호

시행 자치행정과-10185 (2005.11.16.) 접수

총무과-8198

(2005.11.17.)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 / seawood@gb.go.kr

/ 공개

- 38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지자체 한시인력 보강 지침



행 정 자 치 부
(지방공무원제도팀)

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 지자체 한시인력 보강 지침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임.

I. 추진경과 및 배경

- '04. 9.23,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발의(한나라당)
 - '04.10.20,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발의(열린우리당)
 - '04.10.21,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통합 특별법』 발의(민노당)
 - '05. 5.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국회통과
 -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및 건국 전·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의 진실 등을 밝혀내어,
 -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
- ※ 시행일 : 법 공포후 6월 경과한 날(2005.12.1)
- '05.10.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에서 2005.12.1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과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전담인력 보강 협조요청

II. 「과거사위원회」 개요

- 위원회 명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독립기구)
- 근거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구 성 :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대통령이 임명)
 - 국회 선출 8인(상임위원 2),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2), 대법원장 지명 3인
- ※ 위원장, 상임위원 : 정무직
- 주요기능
 -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
 -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
 - 기타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등
- 주요일정
 - 신고접수 : '05. 12. 1 ~ '06.11.30
 - 사실조사 :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진실규명 범위(법 제2조)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위원회 사무처 : 사무처장(1급), 2국 1관, 7과 총 120명 구성(예정)

Ⅲ.

「과거사정리」관련 업무전담 인력 보강

□ 기본방향

- 신고 대상자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인력 1명씩 배치
- 신고서 접수기간,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을 고려하여 한시인력으로 보강

□ 인력보강

- 시·도, 시·군·구별로 전담인력 각 1명씩을 보강하되, 원활한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해,
 - 시·도는 행정6급으로, 시·군·구는 행정7급으로 충원

< 인력보강 내용 >

◇ 증원인력 : 자치단체별 각 1명, 총 250명

- 시·도 : 각 1명(행정6급), 총 16명
- 시·군·구 : 각 1명(행정7급), 총 234명

- ※ 자치단체에서 할 일(예정) : 신청서접수·검토, 상담, 진실규명 신청 절차와 방법의 홍보, 위원회 업무협조(자료수집·조사활동 지원) 등
- 신청서는 접수 후 위원회로 이송

□ 인력 배치부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자치행정부서'에서 피해접수, 실무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업무의 연계성과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해 자치행정 부서에 배치(권고)

- 42 -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접수·상담	· 진실규명의 신고접수·상담 및 분류	· 과거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검토 및 기초조사	· 신청된 내용 사실확인 및 기초 자료조사	· 과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조)
↓		
기각·조사대상결정 및 이의신청	· 기각, 조사대상 심의·의결 통보 및 이의신청	·
↓		
사실조사개시	· 진실규명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		
조사결과 심의·의결· 통보 및 이의신청	· 조사결과 심의·의결통보 및 이의신청 · 과태료 및 보상금 산정	·
↓		
사료편찬 및 진실화해 조치	· 조사보고·사료편찬 및 공표, · 화해조치, 명예회복·재단설립 등	·

□ 인력 보강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 지침을 근거로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전담인력을 보강(※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지침 통보)
-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중 정원 증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정원증원 승인을 받아 조치
 -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인 10개 자치단체는 제외

□ 인력보강 기한 : 2005.12.1~2006.12.31(한시)

※ 신고접수는 2005.12.1~2006.11.30까지이나 후속조치 및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을 감안

IV.

-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서 접수('05.12.1) 등 과거사정리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 본 지침을 근거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한 후 인력충원
- 보정정원 초과 자치단체의 정원증원 승인신청은 시·도에서 취합 2005.11.18(금)까지 제출(신청서 양식 : 붙임)
- 기타 과거사정리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02-2287-2569)」으로 문의

※ 붙임 : 정원증원 승인신청서(별첨)

- 44 -

"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홍보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령-3401(2005. 11. 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가하시고

3. 보정정원을 초과한 시군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05. 11. 28(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1 부

2.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증원내용 1 부

3. 정원승인 신청서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자체별 담당자 명단

★지방행정주시 여세우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근 자치행정과장 11/23 반발록

협조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장훈 지방전산주사보 함진대 지방행정주사 차윤호

시행 자치행정과-10533 (2005. 11. 23.) 접수 총무과-8402 (2005. 11. 23.)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 seawoo@gb.go.kr / 공개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행 정 자 치 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지침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 지침임.

1. 추진배경

-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시행('05.1.30), 보육시설 및 보육 예산의 대폭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지속 증가
 -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당초는 신고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관리 업무 등 신설
 - 보육시설은 '05.6.30현재 3년전 대비 32%(21,267개소→28,040개소), 보육아동은 26%(770,029명→972,391명)가 증가
-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 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 민원 등 보육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의 보육업무 담당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앞으로도, 영유아 정책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함께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 필요

※ 여성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증원 협조요청('05.6.22, '05.10.20)

II. 일반현황

□ 보육시설·아동 및 보육공무원수 증가 비교

구분	2002. 6월	2005. 6월	증가율
보육시설	21,267개소	28,040개소	31.8% 증
보육아동	770,029명	972,391명	26.3% 증
시·군·구 평균 보육담당공무원	2.3명	2.4명	4.3% 증

□ 연도별 보육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4,355	6,551	8,752	13,355	17,236
국비	2,101	3,120	4,050	6,001	7,928
지방비	2,254	3,431	4,702	7,354	9,308

※ '06년 예산은 '0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

- ◇ 영유아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 28,040개소('05.6.30현재)
-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1,352개소)
 -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1,559개소)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지자체의 보육시설 포함) (251개소)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11,178개소)
 -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31개소)
 -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13,669개소)

III. 보육담당공무원 보강

□ 기본 방향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치단체별 요구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
- 시설수, 아동수, 종사원 수 등을 감안 실무인력을 증원하되, 시·군·구는 담당급 설치를 권장

□ 정원 증원

- 총 184개(12개 시·도, 172개 시·군·구) 자치단체에 보육담당 공무원 355명(6급 이하)을 증원
 - 자치단체별로 시설수, 보육 아동수, 보육시설내 종사자수 등을 감안하고, 현 공무원 수 및 여성가족부를 통해 제출된 증원요청 공무원 수 등을 종합 고려
- ※ 지방자치단체별 보강인력 내용 : 붙임(Excel 파일)
- 공무원의 증원은 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규정」상 직급별 비율을 지키어 실정에 맞게 보강하되,
 - 시·군·구는 기존인력과 함께 가급적 담당급을 설치(권고) 하고, 직렬은 행정·사회복지직렬을 원칙으로 증원

□ 인력 보강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 지침을 근거로 '보육업무' 전담인력을 보강(※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지침 통보)
-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중 정원 증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별첨(Excel 파일) "증원공무원" 수 범위내에서 '정원증원 승인'을 받은 후 조치
- ※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인 10개 자치단체는 제외

< 시·도별 인력보강 내용 >

(단위 : 개소, 건, 명)

구분	원 수	증원 요청 수	증원 원 수	비 고
계	606	455.5	355	※ 기초 포함
서울	156.5	48	28	· 자자체별 세부 내역 : 별첨
부산	41	22	21	
대구	16	20	20	
인천	24.5	23	22	
광주	13	13	10	
대전	11.5	18	14	
울산	9.5	8	10	
경기	118.5	120	84	
강원	18.5	22	20	
충북	22	11.5	12	
충남	26.5	27	22	
전북	29.5	23	17	
전남	33.5	38	26	
경북	35	23.5	17	
경남	42	32	26	
제주	8.5	6.5	6	

IV. 행정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 지침을 근거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되,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한 후 증원
- 보정정원 초과 시군에서는 2005.11.28(월)까지 제출(신청서 양식 : 붙임)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직급별 비율을 1차 검토·조정 후 제출하되, 6급은 기초자치단체의 '보육담당' 설치권장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신청
- 기타 보육관련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보육기획과(☎ 02-21007-6813~7·9)로 문의

※ 별첨(Exel 파일) : 1. 자치단체별 보육공무원 증원내용
2. 정원증원 승인신청서

참고자료 1**보육관련 증가업무 현황**

구분	2002년	2006년	비고
1)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구성	-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신규
2) 보육계획 수립		-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규
3) 보육시설 수급 계획 마련	-	-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 설치 사전 상담제 도입	신규
4) 보육시설 평가 인증	-	- 평가인증(매3년마다 전 시설) 협력 및 홍보	신규
5)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	- 종사자 경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 종사자 : 131천명('05)	신규
6)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 자체확충계획수립 - 위탁업체 선정 관리 - 확충관련 부지선정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 추가 업무 증가	신규 + 증가
7)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강화	- 국공립, 법인 위주 ※ 시설수 : 2,993개소	- 전체시설 지도감독 강화 ※ 시설수 : 28,040개소	증가
8) 보육료 지원증가	- 지원대상 : 10만명	- 지원대상 : 61만명	증가
9) 종사자 보수교육	-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 종사자 : 94천명	-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 -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업무 증가 ※ 종사자 : 130천명('05)	증가

- 52 -

	2002년	2006년	비고
10) 교재교구비 지원	7,878개소	24,640개소	증가
11) 차량운영비 지원	790개소	4,777개소	증가
12) 정부지원 보육 시설 인건비 지원	15,370명	37,365명 ※반당 아동수 확인 필요	증가
13)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	33,322반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반당 아동수 확인 필요	신규
14)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200개소)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824개소)	증가
15) 영유아보육법령 전면개정	-	시설설치, 종사자 관련규정 대폭 강화로 민원·상담업무 증가	신규
1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	보육시설별 운영위원회 설치 지도 및 독려 ※ 40인이상 시설 8,084개소	증가
17) 기타 신규업무 등	-	- 시·도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 보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회 등 요구자료 폭증	증가

※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지자체별 공무원 수 및 업무량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인원(명)	기관(개소)	기초공무원 인원(명)	기초공무원 인원(명)	기초공무원 인원(명)	기초공무원 인원(명)	기초공무원 인원(명)
총계 및 평균	606	48	558	54	1,969	262	1,244
서울	156.5	12	144.5	37	1,225	178	992
부산	41	4	37	43	1,610	208	974
대구	16	2.5	13.5	91	3,446	454	2,341
인천	24.5	3	21.5	61	1,967	254	1,058
광주	13	1.5	11.5	89	3,447	472	2,056
대전	11.5	2	9.5	100	2,340	365	1,775
울산	9.5	2	7.5	80	2,718	372	1,179
경기	118.5	8	110.5	67	1,953	266	1,009
강원	18.5	2	16.5	47	2,045	235	1,102
충북	22	2	20	43	1,933	238	1,071
충남	26.5	2	24.5	45	1,748	226	950
전북	29.5	2	27.5	42	1,776	234	1,212
전남	33.5	1	32.5	28	1,426	171	984
경북	35	1	34	40	1,538	204	923
경남	42	2	40	50	1,661	232	915
제주	8.5	1	7.5	55	2,641	341	1,359

※ · 보육 전담은 1인, 다른 업무와 겸직할 경우 0.5인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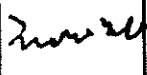
· 자료 : 2005년 보육통계 및 여성가족부 자체 조사자료(9월)

자치단체별 보육담당공무원 증원 내용

단위 : 개소, 건, 명)

지 역	구 분	시설수×10 (A)	아동수 (현 원) (B)	종사자수 (C)	관리건수 (A+B+C)	산 출 (필요) 공무원수	현 공무원수	지자체 증원요청 공무원수	증 원 공무원수
경북	소 계	12,860	49,878	4,636	67,374	70	35.0	23.5	17
	경상북도					6	1.0	3.0	총액시범
	포항시	2,350	9,312	914	12,576	9	2.5	2.5	3
	경주시	1,310	5,300	509	7,119	6	2.0	0.5	1
	김천시	570	2,601	196	3,367	3	2.0	1.0	1
	안동시	670	2,849	262	3,781	3	2.0	0.5	1
	구미시	2,640	8,586	813	12,039	9	2.5	1.5	2
	영주시	430	2,011	186	2,627	3	1.5	1.5	2
	영천시	460	2,010	184	2,654	3	1.5	1.0	1
	상주시	440	1,288	141	1,869	2	1.5	1.0	1
	문경시	280	1,026	94	1,400	2	1.0	1.5	1
	경산시	1,780	6,153	614	8,547	7	3.5	1.5	2
	군위군	40	192	14	246	1	1.0	0.5	0
	의성군	140	820	63	1,023	2	1.0	0.5	1
	청송군	90	460	38	588	1	1.0	0.5	0
	영양군	30	176	14	220	1	1.0	0.0	0
	영덕군	90	504	34	628	1	1.0	0.5	0
	청도군	140	627	50	817	1	1.0	1.5	0
	고령군	140	595	42	777	1	1.0	1.5	0
	성주군	180	710	63	953	1	1.0	0.5	0
	철곡군	750	2,653	249	3,652	3	1.5	0.0	0
	예천군	80	425	34	539	1	1.0	0.5	0
	봉화군	70	435	36	541	1	1.0	0.5	0
	울진군	160	1,033	81	1,274	2	1.5	1.0	1
	울릉군	20	112	5	137	1	1.0	0.5	0

- ① 산출(필요)공무원 : 관리건수 1,000건 이하는 1명, 1,000~2,500건 2명, 2,500~4,000건 3명, ..., 22,000~23,500건 16명, 23,500건 이상 17명 으로 1,500건 단위로 1명씩을 추가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형평성 있는 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한 인력의 기준자료는 아님을 유의.
- ② 보육시설수, 아동수, 종사자수는 2004. 11월말, 보육담당공무원수는 2005. 9월말 기준
- ③ 보육담당 공무원이 다른업무와 겸직할 경우 0.5인으로 표시
- ④ 경기도는 기(10.19) 승인한 4명을 감안 조정

문서번호	총무과 8384	인사담당	총무과장	행정지원 국 장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5년	장주철		김기근	하남근	
보고일자	'05. 11. 23.					

2005. 12월말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職級職列 定員策定 調整(案)

榮 州 市

2005. 12월말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에 따른

職級職列 定員策定 調整(案)**□ 策定調整 背景**

- 2004. 10. 26(화) 영주시청직장협의회 협의회 건의사항 수용
- 일부직렬의 상위직급(기능6, 7급) 편중으로 타직렬 직원 사기저하

□ 技能職 現況

직 렬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68	160	5	5	15	20	24	89	50	38	74	8
통신원	3	3						3(3)	2		1	
교환원	1	1						1(1)	1			
전기원	13	12	2	2	3	7(4)	6	2(1)	2	1		
기계원	14	14	2	2	6	7(1)	6	5				
난방원	5	5				1(1)	3	2	2	1		1
운전원	43	43	1	1	3	3	4	35(31)	17	4(18)	18	
화공원	1	1					1	1				
위생원	8	8						5(5)	5	3(3)	3	
사무원	39	36			2	1	2	22(19)	12	13(23)	23	
전산원	4	4						1(1)	1	2(2)	3	1
조무원	36	32			1	1	2	12(10)	8	13(16)	25	6
방호원	1	1								1(1)	1	

※ 정원·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속승진으로 인한 것임

□ 策定調整 要因

- 2005. 12월말 정년퇴직 : 2명(결원예정)
 - 6급 : 1명(수도사업소 기계장 이종길)
 - 7급 : 2명(6급 후속승진 1명, 수도사업소 전기장 정치권)
- ※ 승진인원 : 3명(6급 1명, 7급 2명)

技能職 7級公務員 職級・職列 定員策定(案)

○ 기능7급 정·현원

- 정원 : 15명(전기3, 기계6, 운전3, 사무2, 조무1)
- 현원 : 20명(전기7, 기계7, 운전3, 사무1, 조무1, 난방1)
- ※ 7급결원(정년퇴직. 05.12.31) : 2명(6급승진 후속, 수도사업소 7급 전기원 정치권)

직렬 (8급정원)	7급정원책정기준													7급정원 책정(안)
	8급 현원 비율 (10% 반영)			공무원경력 20년이상 (40%반영)			8급경력 5년이상 (40%반영)			8급 50세이상 (10% 반영)			가중치 비율 합계	
	인원	비율	10%	인원	비율	40%	인원	비율	40%	인원	비율	10%	100	인원
계(24)	88	100	10	35	100	40	23	100	40	24	100	10	100	2
전 기(6)	2	2.27	0.23				1	4.34	1.736				1.966	
기 계(6)	5	5.68	0.57				2	8.7	3.48				4.05	
난 방(3)	2	2.27	0.23	1	2.9	1.16	2	8.7	3.48				4.87	
운 전(4)	35	39.77	3.98	10	28.5	11.4	10	43.5	17.4	14	58.3	5.83	38.61	
사 무(2)	22	25.00	2.50	9	25.7	10.28				2	8.4	0.84	13.62	전제우 제외 (12.31 퇴직)
조 무(2)	11	12.50	1.25	9	25.7	10.28	4	17.4	6.96	5	20.8	2.08	20.57	박중대 제외 (12.31 퇴직)
화 공(1)	1	1.14	0.11	1	2.9	1.16	1	4.34	1.736				3.006	
통 신(0)	3	3.41	0.34	1	2.9	1.16	1	4.34	1.736				3.236	
교 환(0)	1	1.14	0.11	1	2.9	1.16	1	4.34	1.736				3.006	
위 생(0)	5	5.68	0.57	3	8.5	3.4	1	4.34	1.736	3	12.5	1.25	6.956	
전 산(0)	1	1.14	0.11										0.11	

※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는 직렬은 근속승진자임

○ 정원책정 조정(안)

<제1안> : 위 책정기준보다는 7급이상 정원이 있는 직렬을 제외, 공무원 경력순에 의한 소수직렬 위주로 정원 책정하되 일부직렬은 복수직 책정
⇒ 2명(위생원 1, 교환원+통신원 1)

<제2안> : 책정기준에 따라 가중치 비율이 높은 직렬위주로 책정
⇒ 2명(운전원 1, 조무원 1)

<제3안> : 연령 위주로 책정
⇒ 2명(운전원 1, 위생원 1) 또는 (운전원 1, 조무원 1)

※ 참고 : 7급까지는 근속승진 제도 적용됨(8급경력 8년)

⇒ 2006. 5.16 근속승진 예정(4명 : 난방 2, 기계 1, 전기 1)

- 타 직렬 책정시 규칙(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후 승진